

26.09.23.(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 오재현 선임비서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30만 민생을 뒤흔든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불기소 가닥’ , 검찰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3일 보도됐다. 지난해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1년 5개월이나 보강수사를 거쳐 나온 황망한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올해 1월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사건의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다” 면서도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다. 검찰 역시 영장 기각 이후 사건을 다른 부서에 재배당하면서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제 답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졌으며, 왜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는가.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25일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고, 같은 날 오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월 28일 실제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하락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병주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적자 및 경영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장 청구 당시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가 주요 혐의로 제시됐다.

물론 이러한 정황만으로 김병주 회장의 형사책임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다.

특히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전단채 발행 과정의 일부 기망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김병주 회장의 직접 지시나 사전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책임선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그 판단 과정은 더욱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만의 사건이 아니다.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주, 납품·협력업체, 피해자와 가족 등 30만 민생이 연결된 문제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도 이 범위를 포함해 30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전자단기사채 피해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2026년 6월 기준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상환되지 않은 전단채가 약 4,19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법원 중재 과정에서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약 4천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조속한 기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을지로위원회 역시 대검찰청 앞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이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번 처분 논의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장기 미제사건 처리가 빨라지는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 중앙지검이 공소청 출범 전 사건 처분을 목표로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제도개편 일정 때문에 결론이 서둘러진 것은 아닌지 역시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김병주 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수사팀이 왜 기존 판단을 변경했는지, 불기소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홈플러스 전단체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면밀히 따질 것이다.

홈플러스가 회생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살려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 하며, 책임질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30만 민생을 지키는 일과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피해자들과 함께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